

‘문 전 대통령 사저 시위’ 친누나 채용 맹폭

野 “이래서 방조했나?”

더불어민주당은 13일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고성·옥설 시위를 벌여온 유튜버 안정권씨의 친 누나가 대통령실 행정요원으로 근무한 것을 맹성토했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시인의 핵심은 육설시위의 유튜버의 친누나가 대통령실에 근무하는데 아니라 이 같은 육설시위의 배후에 대통령실이 있느냐는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실은 보복수사도 부족해 육설 시위로 퇴임한 대통령을 괴롭혔느냐”고 포문을 열었다.

신 대변인은 “알고도 방조한다면 이는 북인”이라며 “한 씨의 누나는

모든 것이 가식과 위선이었다는 뜻”이라고 힐난했다.

문재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지낸 윤영찬 의원 역시 페이스북에서 “저와 동료 의원들이 양진경찰서에 방문했을 때, 서장은 평산미를 앞 혐오시위대에 대한 집시법 대응이 미흡함을 인정했다”며 “하지만 이후에도 상황에는 큰 변화가 없었는데 그 이유가 이것인가”라고 분개했다.

윤 의원은 “급속히 경직된 이 정부의 분위기를 감안하면, 그의 존재가 일선 경찰 입장에서 어떤 시인으로 받아들여지겠느냐”며 “윤 대통령이 전 대통령 사저 앞 혐오 시

김남국 의원 역시 “떳떳하면 수사 받으려던 윤석열 대통령 후보자 시절 빌언처럼 정당하게 채용과정을 거쳤으면 당당하게 근무하면 된다”며 “언론보도가 나오자마자 안 씨가 하루 만에 사의를 표명하고 본인 채널에 영상을 삭제한 것을 보면 떳떳하지 못하다는 반증이다. 논란을 끊으려고 출행랑 치는 것으로는 국민을 속일 수 없다”고 했다.

전용기 의원은 “능력 만 본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국우 유튜버의 누나의 어떤 능력을 보고 대통령실에 근무하게 한 것인가”라며 “민간인에게 대가”도 없이 구분도 없이 대통령 1호기를 타게 하고 6촌의 친인척 대통령실 채용도 모자라 사적인 연으로 대통령실에 채용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공정과 상식 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지금 연좌제가 없기 때문에 누나는 동생은 별도로 직업을 가질 수 있다”면서도 “어쩐지 국민은 참 끼리끼리 해먹는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게 말이 되는 거냐. 그것 때문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님의 지지도가 떨어지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문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 평산미에서 시위를 벌여온 상 플랫폼 업체인 ‘헬리도’의 안정권씨 친누나 안모씨가 대통령실 국민소통관찰 행정요원으로 채용됐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안씨는 ‘헬리도’에서 일하다 지난 해 11월 윤석열 대선캠프에 합류해 유튜브 영상 편집 등을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확산되자 안씨는 대통령실에 사표를 제출했다.

/뉴스

안 씨와 유튜브 활동을 함께 해왔던 민족 대통령실이 채용 과정에서 안 씨의 육설 시위를 모를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97세대 당권주자인 강훈식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코비나컨텐츠 직원, 외가 6촌 사업가 자인 아들, 이제 국우 유튜버의 가족까지, 대통령실의 ‘내식구’가 식 인사는 절망적”이라며 “국정 철학에 국민 통합이 없으나, 인사 참사는 계속될 것”이라고 훈련했다.

당권주자인 박용진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누나 안모씨가 안정권과 함께 출연하거나 이에 방송을 대신 진행한 적도 있는데, 이 사람이 무관하느냐”며 “이런 사람의 채용은 윤석열 대통령의 5·18 기념사업과 선거를 앞두고 국민 앞에 부르짖었던

위를 방관하는 것을 넘어, 돌리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안민석 의원은 “안씨 누나의 사직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누가 추천했고 어떤 경로와 근거로 채용됐는지 밝히시라”며 “세간에는 인사권을 대통령 아닌 부인(김건희 여사)이 휘두르고 있다는 소문으로 들끓고 있다. 이 사건이 불에다 기름을 부은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재명 의원 최측근인 박찬대 의원도 “해당 유튜버가 대통령실의 ‘홍보’를 담당하는 행정요원의 친동생인 것이 과연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인가”며 “정말 윤석열 정부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해치는 시위 마저 방조하려는 것인가”고 질타했다.

안씨는 ‘헬리도’에서 일하다 지난 해 11월 윤석열 대선캠프에 합류해 유튜브 영상 편집 등을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확산되자 안씨는 대통령실에 사표를 제출했다.

/뉴스

尹 지지율 30%대 초반

알앤씨치 여론조사 결과

긍정 32.5% · 부정 63.5%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일주일 만에 10%포인트 넘게 하락해 30%대 초반으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씨치는 뉴스 펌의뢰로 지난 9~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4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지지율(긍정)은 32.5%로 집계됐다고 13일 밝혔다. 윤 대통령 부정평가는 63.5%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 조사 대비 10.1%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부정평가는 같은 기간 10.1%포인트 증가했다.

윤 대통령은 전 연령대에서 부정평기가 앞섰다. 특히 윤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 60세 이상에서도 긍정 44.8%, 부정 50.1%로 부정평기가 과반을 넘었다. 40대와 50대에서는 부정평

기가 70%를 넘어섰기도 했다.

지역별로 보면 보수 텃밭인 영남권에서도 부정평기가 더 높았다. 특히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부정평기가 50.7%로 직전 조사(33.5%)에서 17.2%p 급증하며 조사 이래 처음으로 과반을 넘었다. 대구경북 지역 긍정평기는 47%에 그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별·연령대별·지역별 인구 구성비에 따른 비례할당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번호(100%) 방식으로 실시됐다. 응답률은 2.4%, 표본오차는 95%의 신뢰수준에 ±3.0%p다.

/뉴스

가가 70%를 넘어섰기도 했다.

지역별로 보면 보수 텃밭인 영남권에서도 부정평기가 더 높았다. 특히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부정평기가 50.7%로 직전 조사(33.5%)에서 17.2%p 급증하며 조사 이래 처음으로 과반을 넘었다. 대구경북 지역 긍정평기는 47%에 그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별·연령대별·지역별 인구 구성비에 따른 비례할당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번호(100%) 방식으로 실시됐다. 응답률은 2.4%, 표본오차는 95%의 신뢰수준에 ±3.0%p다.

/뉴스

가가 70%를 넘어섰기도 했다.

지역별로 보면 보수 텃밭인 영남권에서도 부정평기가 더 높았다. 특히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부정평기가 50.7%로 직전 조사(33.5%)에서 17.2%p 급증하며 조사 이래 처음으로 과반을 넘었다. 대구경북 지역 긍정평기는 47%에 그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별·연령대별·지역별 인구 구성비에 따른 비례할당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번호(100%) 방식으로 실시됐다. 응답률은 2.4%, 표본오차는 95%의 신뢰수준에 ±3.0%p다.

/뉴스

민주, 지명직 최고위원에 ‘비수도권’ 안배

당 중앙위, 당헌 개정안 의결

더불어민주당이 비수도권 인사들의 당 지도부(최고위원회) 입성을 제도적으로 안배하기 위해 당헌을 개정했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인사 중심으로 최고위원회가 꾸려져 전국 단위 민심의 흐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중앙위원회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중앙위는 이날 “중앙위원 총 554명 중 395명(71.3%)가 특표에 참여해 찬성은 365명(92.41%) 반대는 30명 (7.59%)이었다”며 당헌 개정안 의결을 선포했다.

개정된 내용은 당 대표와 최고위원의 선출과 임기, 최고위원회의 지위와 구성에 관한 부분이다.

구체적으로 이번 전당대회 본 투표

에서는 대의원 30%, 권리당원 40%, 국민 여론조사 25%, 일반당원 5%를 반영한다. 이는 현행 대의원 45%, 국민 여론조사 10%였던 비율을 조정한 것이다.

눈에 띄는 것은 제26조 최고위원회의 지위와 구성 부분이다. 여기에는 ‘선출직 최고위원 중 비수도권 당선자 가 없는 경우 지명직 최고위원에 비수도권 인사를 우선 배려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앞서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전대 규칙안 개정 당시 ‘최고위원 선거 권역별 투표제 도입’을 시도했던 것과 같은 취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당 관계자는 설명했다.

우 비대위원장은 당시 논란이 됐던 ‘최고위원 선거 권역별 투표제’에 대해 “지난 수년간 호남·충청·영남 출신 의원들이 최고위원으로 지도부에 입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정한 것”이

라고 설명한 바 있다.

민주당이 최고위원회가 수도권 인사 중심으로 구성되면서 소위 ‘수도권 정당’으로 전락하고 있는데, 다음 총선을 앞두고 전국적 여론을 정착해야 할 지도부에 호남·충청·영남 출신 의원들이 진입하지 못하면 상황이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것이다.

당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예정된 8·28 전당대회에서 주인을 받은 후 적용된다. 적용되면 개정안에 담긴 내용대로 최고위원 선거에서 비수도권 인사가 당선되지 않았을 경우 당 대표·권한에 의한 지명직 최고위원 2명에 비수도권 인사를 우선 배려해 지명할 수 있게 된다.

민주당 최고위는 당 대표·원내대표·선출직 최고위원 5명과 대표·권한으로 지명하는 지명직 최고위원 2명 등 9인으로 구성된다.

“유능한 민생정당 앞장”

민주 익산을 지역위
핵심당원 교육 성료



더불어민주당 익산시 지역위원회(위원장 한병도 국회의원·사진)가 지난 11~12일 양일간 핵심당원 교육을 성황리에 마무리 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에는 한병도 지역위원장과 소병홍 지역위 수석부위원장, 윤영숙·한정수 전북도의원, 유재구·김경진·김진규·오인선·한동연·김순덕·소길영·신용·정영미·양정민 익산시의원 등 지방의원 전원과 한병도 의원실 보좌진 전원이 참석했다.

지난 6.1 지방선거 이후 효율적인 지역위원회 운영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개최된 이날 행사에서는 민선 8기 도·시의원과 지역위원회 간 소통 및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향후 익산시 발전 전략을 토론하며 유능한 민생정당으로의 발전을 다짐했다.

한병도 위원장은 “이번 교육은 지역위원회 간부와 도·시의원, 보좌진까지 한자리에 모여 익산 발전에 머리를 맞댄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 민주당 익산시 지역위원회는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민주당이 유능한 민생정당으로 거듭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전주천을 살립시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하천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슬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통과 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

전주매일 캠페인